



즉시 사용

비고	* 모두말씀 :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국가보훈처	
담당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팀장 성현국, 사무관 박찬우 (044-200-2089, 2091)
	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	과장 남궁선, 서기관 강현근 (044-202-5210, 5215)
	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	과장 황후연, 사무관 강대원 (044-202-5450, 5456)

문재인 정부,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 실현

- 「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(‘18~‘22)」 심의·확정, 80개 과제 추진
- 여성·학생·의병 등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 및 발굴·포상 확대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8일(금) 오전 10시 30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*를 주재했습니다.

*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, 위원장(국무총리)과 부위원장(민간)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정부·민간위원으로 구성(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, 제13조)

-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 ‘14.1월 개최

※ 참석자

- 정부위원(14명) : 국가보훈처장, 외교·통일·법무·국방·문체·복지·여가·국토부 장관, 기재·교육·행안·산업·고용부 차관
- 민간위원(12명) : 김주현(부위원장), 조석희, 조흥식, 김은주, 박성희, 이준식, 김종성, 정철영, 정혜승, 김갑제, 정철승, 황혜신

○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보훈위원회로서, 「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(‘18~‘22)」을 심의·확정하고, 「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- 「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(‘18~‘22)」은 ‘국가보훈기본법’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,
 -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보훈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.
 - 「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(‘18~‘22)」은 ‘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’을 비전으로 하여,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.
 - 이를 위해 ①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②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③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·복지 ④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⑤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, 24개 중점과제(80개 세부과제)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또한,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, 「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」이 논의됐습니다.
 - 이를 토대로, 여성·학생·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,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, 올해 8·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했습니다.
 - 외국인 독립유공자,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빠짐없이 찾고 예우해 드리기 위한 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.

-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위해 '대한애국부인회', '송죽회' 등에 대한 자료발굴과 중국·하와이 등에 존재 가능성이 있는 해외 여성독립운동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교부·보훈처가 협력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.
 - 또한,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없어 국민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'무후선열'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특별히 예우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.
 - 지방분권화에 맞춰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에서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,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억의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.
- 한편,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(임기 2년)했으며, 회의 후 이어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추가로 청취했습니다.

- ※ (붙임) 1. 「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('18~'22)」주요내용
 2. 「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」주요내용
 3.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(14명) 약력

< 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>

-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우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
 - 우선,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여성, 의병 등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, 2019년에는 4·19혁명 참가자분들에 대한 추가 포상 추진
 -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기 위해, 국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보급사업*을 추진,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·25참전 비군인(4만명), 월남전 참전유공자(6.6만명)도 적극 발굴하여 등록
 - * 우선, 독립유공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(단계적 확대)
 - 국립묘지 의전단을 민주묘지(‘19년), 신암선열공원(‘20년)까지 확대 설치하고, 부족한 안장여력을 감안하여 괴산(‘19년, 1만기)·제주(‘21년, 1만기) 국립묘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

<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 체계 >

-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마련
 -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보상 기준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*, 보훈보상금은 사회지표를 감안하여 지속인상을 추진
 - * 민간참여 보훈보상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
 -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확보(연 8천명)하고, 맞춤형 교육컨설팅 진행
 -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, 보훈 PR*(Pre-Registration / Public Relation)을 적극 실시하고, 보훈심사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
 - * 군 병원, 군 부대 등 방문·안내 정례화, 등록 상담사 운영 등

< ③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·복지 >

-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감안하여, 맞춤형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
 - 전국 권역별(4개소)로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심리재활 서비스를 도입하여 맞춤 재활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, 강원권('20년)과 전북권('21년)에 보훈요양원을 확충하여 지역에 따른 편차 해소
 -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원 예정

< ④ 나라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>

- 미래세대가 보훈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VR 콘텐츠, 체험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독립·호국·민주화와 관련된 기념관을 건립*하여 역사적 자산으로 사용
 - * 임시정부기념관('21년 완공), 호국보훈기념관(순천, '19년 완공), 민주화기념관 건립 추진
- 현충시설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화 종합화하고,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복원 강화
 - * 중국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원형 복원('19년), 충칭 임정기념관 전시물 교체('18년)
-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위해,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행사를 정부(보훈처) 주관으로 거행하고, 6·10만세운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, 2020년 각종 10주기 기념행사*를 범국민적 행사로 준비
 - * 2·28, 3·15, 4·19 60주년, 5·18 40주년, 6·25 70주년

< ⑤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>

-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 강화, 일자리 발굴과 해외취업 지원 적극 추진, 여성 제대군인 맞춤 취업지원 확대
- 2020년 6·25 전쟁 70주년 계기 역대 최대 규모로 UN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UN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지속 확대

□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포상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

* (기존) 수형·옥고 3개월 이상 → (변경)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가능

- 여성은 당시의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일기, 회고록 등 직·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 검토
-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신분 상 특수성을 감안,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, 포상 추진
- 의병의 경우 수형·옥고위주의 포상기준을 개선하여,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저기준(3개월 이상)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포상
- 그동안 포상에 소극적이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,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

붙임 3

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(14명) 약력

(분과위원장, 가나다 순)

연번	사진	성명 (나이)	직위/직책	학력 / 주요경력
1		김주현 (69세) <i>*부위원장 겸 선양정책 분과위원장</i>	한국장애인 개발원 비상임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대 행정학 박사 · (前) 독립기념관장 · (前)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· (前) 행정자치부 차관 · * 김상환 애국지사 자녀
2		조석희 (60세) <i>*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장</i>	국방여성정책 연구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여군 30기(예비역 육군 중령) · 광운대 환경공학 박사 · (現) 강원대 환경연구소 교수 · (現) 국방여성전우회장
3		조흥식 (66세) <i>*보상정책 분과위원장</i>	한국보건의사회 연구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· (現)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· (前)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
4		김갑제 (64세)	광복회 광주전남 지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남대 행정대학원 · (前) 무등일보 주필 · * 호남의병장 김태원 장군 손자 · * 5·18민주화운동 유공자
5		김은주 (59세)	연합뉴스 논설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 · (前)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 · (前) 국조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
6		김종성 (67세)	(前) 보훈처 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희대 행정학 박사 · (前)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· (前) 동양대 초빙교수 · (前) 한국보훈학회 회장
7		박성희 (56세)	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美 퍼듀대 언론학 박사 · (現)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· (現)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 · (現) 한국국제교류재단 비상임 이사
8		이준식 (63세)	독립기념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세대 사회학 박사 · (前)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· (前)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· (前)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
9		정철승 (49세)	변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대 법학과 · 제41회 사법고시 합격 · (現) 보훈처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지기금 운용심의회 위원

연번	사진	성명 (나이)	직위/직책	학력 / 주요경력
10		정철영 (61세)	서울대 산업인력 개발학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美 오하이오 주립대 산업인력개발학 박사 · (前)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 · (前) 서울대 학생처장, 학장 · (前)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
11		정혜승 (55세)	KBS 광주총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홍익대 불문학과 · (前) KBS 뉴스제작3부장 · (前)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
12		황혜신 (50세)	한국행정 연구원 선임연구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대 행정학 박사 · (現)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· (現)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 · (現) 보훈처 자체평가위원